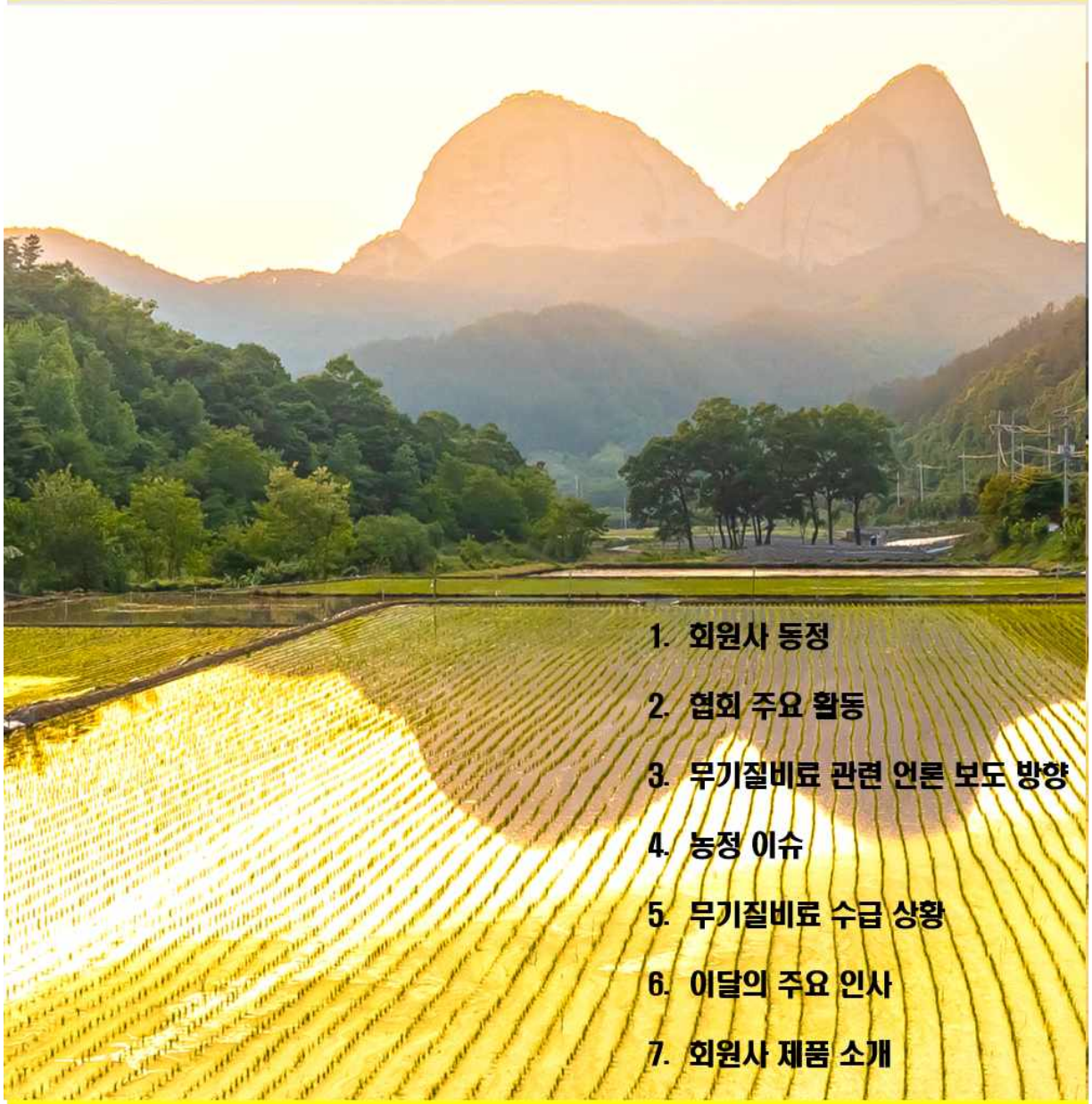
KFA 비료와 식량 2025년 12월호

# Fertilizer & Food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 보도 방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6. 이달의 주요 인사
7. 회원사 제품 소개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 가성비 좋고, 안전하며, 효과적입니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3 FAX : 02-552-2814
남해화학㈜ · ㈜조비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 KG케미칼㈜

## 1 회원사 동정

### ❑ 남해화학(주)

○ “농심으로 따뜻한 겨울을” … 남해화학, 김장김치 1t 나눔

– 전남 여수 취약계층에 10kg 100상자 전달, 자체 비료로 키운 배추로 담가 더 의미

김창수 남해화학 대표(앞줄 왼쪽)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13일 전남 여수 남해화학 사택아파트 앞에서 김장김치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남해화학

남해화학은 3일 남해화학 비료를 사용해 수확한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 1t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자수로는 10kg들이 100상자 분량이다.

남해화학 본사가 자리한 전남 여수지역 복지기관인 가나헌, 동행빌리지, 예리고의 집, 문수종합사회복지관, 환경공해추방운동본부 등을 통해서다.

김창수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게 건강한 농산물로 만든 김치를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과 '농심천심(農心天心)'의 가치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해화학은 김장김치 나눔 외에도 지역 복지기관에 쌀·생필품을 지속해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농민신문(2025.12.5.) 기사내용 인용

○ 남해화학, 지역 어르신 50세대에 '안심화장실' 조성

1,000만 원 상당 안전바·미끄럼방지 매트 설치로 낙상 사고 예방

여수시노인복지관은 남해화학 후원으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50세대에 1,000만 상당의 화장실 안전바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다.

이번 지원은 가정 내 낙상 사고 예방이 시급한 안전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화장실은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안전바와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는 어르신들의 안전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남해화학 김창수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어르신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노인복지관 김진우 관장은 "이번 지원 덕분에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큰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신 남해화학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여수넷통뉴스(2025.12.3.) 기사내용 인용

❑ ㈜팜한농

○ 팜한농, 케이엔제이·한국기계연구원과 '도심형팜' 구축·운영 협약 체결

- 케이엔제이 공장 옥상에 도심형팜 '창사원' 구축
- 사계절 푸른 웰니스 커뮤니티 공간 조성 .... ESG 경영 실천

팜한농(대표 김무용)이 3일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 기업 케이엔제이(대표 심호섭),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류석현)과 ESG경영 실천을 위한 '첨단산업시설의 도심형팜 구축 및 운영'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 김무용 팜한농 대표(왼쪽)와 심호섭 케이엔제이 대표(가운데), 류석현 한국기계연구원장(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 아산 케이엔제이 본사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케이앤제이는 도심형팜 조성 공간 제공 및 투자를 주관하고, 팜한농은 도심형팜 설계, 시공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이와 연계해 첨단산업시설의 공기-물-먹거리 순환 환경 기술 개발과 실증을 담당한다.

케이엔제이의 신축 공장 옥상에 조성되는 도심형팜은 자연 채광형 유리온실이며, 직원들이 작물을 직접 키우고 수확하는 공간과 소통하며 휴식하는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무용 팜한농 대표는 "도심형팜 '창사원'이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웰니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산업단지에서도 ESG경영 가치 제고와 조직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기자재신문(2025.12.4.) 기사내용 인용

## ❑ ㈜풍농

### ○ 작물에 흡수 빠른 질산태질소 함유 기능성비료 "뿌리왕왕PN, 왕왕질산NK"

- 저온 및 불량한 환경에서도 빠른 뿌리활착, 왕성한 생육으로 비료이용율 향상
- 원예·과수류 일반재배 뿐만 아니라 월동작물 생육향상 최적

밑거름(13-8-⑨+1+0.2,유황10, 황산칼륨 함유

웃거름 15-1-12+1+0.2, 유황함유

기능성 질산태질소, 유황함유 "**뿌리왕왕PN(13-8-9+1+0.2)**" "**왕왕질산NK(15-1-12+1+0.2)** " 엔피코비료에 농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엔피코 뿌리왕왕PN, 왕왕질산NK는 작물 정식(파종)후 냉해, 가뭄 등 불량환경에서도 작물 양분흡수력을 높여 빠른 뿌리활착 등 생육향상에 효과적인 질산태질소를 함유한 기능성비료 입니다.

질산태질소 및 유황 함유 엔피코 뿌리왕왕PN, 왕왕질산NK는 모든작물이 좋아하는 흡수형태로 빠르게 이용가능한 질산태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를 균형적으로 공급하므로 적기에 양분을 빠르게 흡수해야 하는 마늘, 양파 등 월동작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확, 출하를 위한 배추, 무 등 가을재배 작물, 원예·과수류 등의 생육에 효과적입니다. 요소나 암모니아태 질소만을 함유한 관행 복합비료 대비 뿌리발육이 왕성하고, 성장이 빠르며, 수량성 확보가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공인기관 오이 재배 시험결과 초장 등 생육이 우수하며, 주당과수 4~6%, 주당과중 7~8% 향상, 과중이 무거워 7~9% 수확량 증가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기능성비료로 농가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시험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풍농은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수확량 증수에 적합한 기능성 제품으로 질산태 함유 뿌리왕왕PN과 왕왕질산NK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주)풍농 제품 설명자료(2025.12.23.) 인용

## 2 협회 주요 활동

❑ 농업 전문지 기자 송년회(12.10, 협회 회의실)

○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협조 감사 인사 및 보도자료 제공 의견 교환

❑ 농식품부, 농과원 등 대외협력 업무추진

○ 2025년 농기자재 수출 확대 워크숍 참석(12.12, 서울)

○ 농업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민관협의체 발족식 참석(12.23, 전주)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주최, 정부기관·지자체, 학계·업계 등 43명 참석
- 농진청 연구성과를 특정업체 지원이 아닌 무기질비료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산 건의

##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보도 동향

❑ 2026년 농식품부 예산, 총 20조 1,362억 원 확정

- 정부안(20조 350억 원) 대비 1,012억 원 증액, '25년 예산 대비 7.4% 증가
- 농어촌 기본소득,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등 현장 체감도 높은 예산 중점 증액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20조 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7.4%(1조 3,946억원) 증가된 규모**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다.

*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3) 17조 3,574억원 → ('24) 18조 3,392억원 → ('25) 18조 7,416억원

사업별 추가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크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되었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65만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농번기 인력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개소)·**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개소) 예산 **30억원**과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원대상 면적 확대(1만ha→2)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77억원**도 **추가 반영**되었다.

그 밖에,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예산 **51억원**, 안정적 농산물 공급·유통을 위한 **저온유통시설 설치** 예산 **5억원**,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SOC 확충** 예산 **174억원** 등 총 **34개 사업**이 **추가 반영**되었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26년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붙임 1.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인포그래픽
2. 농식품부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 사업

## 붙임 1 2026년 농식품부 예산 인포그래픽

## 붙임 2 농식품부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5년 예산 | '26년 예산 | | |
|---|---|---|---|---|
| | | 정부안 | 국회 증액 | 최종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 | **170,337** | +63,738 | 234,075 |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 | +15,780 | 15,780 |
| 농촌고용인력지원 | 27,288 | 39,916 | +3,040 | 42,956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84,738 | 80,752 | +7,675 | 88,427 |
| 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 | - | - | +15,600 | 15,600 |
|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 - | 32,559 | +5,100 | 37,659 |
| **농촌용수관리** | 63,333 | **49,270** | **+2,000** | 51,270 |
| **수리시설개보수** | 761,734 | **747,803** | **+9,099** | 756,902 |
| **농촌용수개발** | 235,682 | **209,745** | +3700 | 213,445 |
| 배수개선 | 485,164 | 641,051 | +2,571 | 643,622 |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 16,631 | **13,598** | +150 | 13,748 |
|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 1,278 | 10,185 | +1,050 | 11,235 |
|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 38,101 | 38,308 | +1,000 | 39,308 |
| **동물복지안전관리강화** | 11,764 | **11,976** | +710 | 12,686 |

※ 농림축산식품부(2025.12.3.) 보도자료 인용

## ❑ “농가 부담 커지나” … 무기질비료 지원금 부족 ‘아우성’

- 372억 요청했지만 156억 반영, 해마다 줄어 4년전 10%도 안돼
- 지방비·농협 분담금 자동 감소, “생산비 오르는데.... 농가 막막”

“인건비·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지원을 줄이면 농민들이 부담을 다 떠안게 됩니다.”

정부의 2026년 무기질비료 보조예산이 농업계 요청액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 올해 지원금보다도 감소한 것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 중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에 156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농업계는 무기질비료 연간 소요 물량의 85% 수준인 85만t에 대한 정부 지원금 372억원을 요청했었다.

정부는 요소·암모니아 등 필수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농업인 자부담 20%)를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로 분담해 지원한다.

현장에선 농식품부 안에 없던 예산을 국회가 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액수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남 순천시 별량면에서 26.4ha(8만평)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김선종씨(38)는 “봄에 모내기를 앞두고 20kg들이 무기질비료를 240포대 정도 사용하는데 지원이 줄어 가격이 한포대당 3000~4000원 정도 오르면 그만큼 손실이 커진다”며 “농약은 공동방제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 지원해주지만 무기질비료는 직접 구입하고 있어 체감하는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준경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장은 “올해 쌀값이 좋다고 해도 벼 깨씨무늬병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 소득이 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경영비가 해마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농자재인 무기질비료 인상분 지원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실제 농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원금이 국비와 지방비, 농협 분담금으로 구성돼 있어 국비 지원이 줄면 전체 지원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농협 관계자는 “정부가 국비를 정하면 거기에 맞춰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 국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머지 지원금도 줄어 실제 농가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서 6.6ha(2만평) 규모로 벼를 재배하는 박창덕씨(65)는 “최근 쌀값이 상승세라 각종 농자재값 인상에도 버텨보려 했다”며 “그런데 무기질비료 지원금 같은 보조금이 줄면 쌀값 상승 효과를 전혀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 비판했다.

생산비 상승은 농산물 소비자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식 전북 김제원예농협 조합장은 “지원 예상 물량이 농업계 요청 물량(85만t)에 한참 못 미치는 65만t으로 줄면 농가들의 경영비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한농가당 가격보조 비료 배정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농산물 가격의 인상 요인이 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서 복합영농을 하는 최승일씨(61)는 “올해 사용한 20kg들이 무기질비료만 3000여포대에 달하는데 올해보다도 지원이 줄어들면 생산비가 급상승하게 된다”면서 “비료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쓰더라도 무기질비료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자재인데 지원금은 줄이면서 매번 농산물 가격 상승만 문제삼으면 농민들은 어쩌란 소리냐”고 한탄했다.

농민들은 해당 예산이 해마다 주는 것도 부족해 예산반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무기질비료 국비 지원은 첫해인 2022년 1801억원에서 2023년 1000억원, 2024년 288억원, 2025년 255억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올해는 2025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5월에서야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렵게 반영됐다.

이보형 농협전국벼협의회장(충남 홍성 광천농협 조합장)은 “왜 해마다 관련 예산을 줄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농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차후에라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천재기 부울경 벼 육묘·신기술 협의회장(경남 고성동부농협 조합장)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농가의 안정생산을 위해 예년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농민신문(2025.12.3.) 보도자료 인용

##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축소 우려

- 정부 예산안, 융자규모 대폭 줄어, 변동금리로 변경...업계 ‘불안’
- 이자비용 늘어 업체수익 악화, “이자부담 최소화해달라” 요구

내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융자 지원규모가 올해보다 큰 폭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료업체들은 국제 환율 변동과 원료 수출국내 정세 불안정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 축소는 농민이 사용하는 비료 제품 가격 인상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요소·염화칼륨·인산이암모늄(DAP) 등 무기질비료 원료를 구매할 때 필요한 비용을 은행에서 대출하면 국비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초 내놓은 '2025년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비료업체는 연 3% 이율로 비료 원료 구매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중 금리와의 차이를 국비로 보전한다.

농식품부는 2022년 6000억원, 2023년 6000억원, 2024년 4000억원 등 연간 4000억~6000억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지원규모도 5000억원이다. 예산 집행률도 연평균 99%에 달한다.

하지만 8월26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2000억원만 반영돼 우려를 낳았다.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앞두고 업계에선 올해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비료업체가 원료 구입에 사용한 비용은 도합 9909억원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의 융자 지원이 업계 비료 구매 자금의 51%를 지탱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선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융자규모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 1.5% 이율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융자 2000억원당 실제 국비 예산 소요량은 30억원이다.

해당 융자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금리로 일원화되는 것도 업계의 불안 요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논의 결과 2026년도 이차보전사업은 변동금리 방식으로 일괄 바뀔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동금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이자가 1%로 정해져 있고, 농업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업체가 부담하는 이자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비료업계에선 부담할 이자율이 바뀌지 않는 고정금리 방식을 선호한다. 업계 관계자 B씨는 "2025년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도 금리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선택 카드를 없앤다면 업계로선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C씨는 "비료는 10~12월 원료를 사고 5~6월 팔기까지 시차가 있어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면서 "융자규모가 줄어들면 대부분 비료업체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D씨는 “최근 시중은행에선 5~6%대 이율을 책정하고 있어 정부 사업 덕분에 2~3%는 금리를 아낄 수 있었다”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고스란히 비료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업체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 E씨는 “업체들은 연초부터 고정금리 방식을 유지하던가 아예 무이자로 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료사업에선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 농민신문(2025.11.27.) 보도자료 인용

## 4 농정 이슈

### 【 국 내 】

### 1 제주 농업 온실가스 대부분은 ‘메탄’과 ‘아산화질소’

**○ 제주농기원, 인벤토리 분석 결과 발표 정밀한 통계·현실적 감축 기술 필요**

제주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27일 제주 농업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흡수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통계 구축과 제주 실정에 맞는 감축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인벤토리는 국가·지역·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주요 배출원별로 배출되거나 흡수된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한 통계자료를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에 따라 비료 사용량·가축 사육두수 등 배출원별 통계자료와 배출계수를 조합해 산정된다.

이번 연구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통계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2023년까지 34년간의 장기 변동 추세를 분석했다.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의 2006년 지침에 따라 비료 사용량, 가축 사육두수 등의 자료를 토대로 배출량을 다시 계산했다.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제주지역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구조는 메탄(CH4) 58%, 아산화질소(N2O) 41%, 이산화탄소(CO2) 1%로 나타나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메탄 배출은 가축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 여러 종류를 모두 합쳐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2년 38만 7,000톤에서 2023년 39만 톤으로 0.8% 늘었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배 분야에서는 농경지 토양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제주 농업의 밭작물 중심 구조와 질소비료 투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질소비료 사용량 절감 기술 개발과 현장 보급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과제임을 보여준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이번 분석이 향후 지자체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확한 감축량 산정, 지역 맞춤형 감축기술 개발, 그리고 탄소중립 이행점검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만 친환경연구과장은 “정확한 인벤토리 구축은 제주 농업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라며 "질소비료를 줄이는 기술과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 등 농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감축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영농신문(2025.12.18.) 보도자료 인용

## 2 ’23년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211조 원, 전체 산업의 8.9% 차지

**○ 산업연관표와 농식품산업 특수분류 상호 매칭을 토대로 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식과 연구 결과 등 논의 자리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7일(수)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붙임 참고)하여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모두 포함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업은 농축산 원물 생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가공, 외식, 식품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이어지고, 최근 여건 변화에 따라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반려동물산업, 그리고 비료, 농약, 농기계와 같은 각종 투입재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주로 쌀·채소·과일·축산업 등 1차 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되어 전 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입재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포장·유통 등 연관 산업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등 신산업을 포함하면 그 비중이 '2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8.9% 수준, 부가가치 규모도 2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규모 및 비중(GDP 대비) 추계 》

《 2023 기준 농식품산업 부가가치(대분류) 추계 》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결과 (단위: 조 원)

| code | 분류명 | 대분류 |
|---|---|---|
| 11 | 농산업 투입재 산업 | 8.4 |
| 12 | 농작물 생산 및 축산업 | 28.3 |
| 13 | 농식품 및 관련 가공품 제조업 | 40.1 |
| 14 | 농산물 도소매업 | 42.4 |
| 15 | 농산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 8.3 |
| 16 | 음식점 및 주점업 | 66.7 |
| 17 | 농산업 관련 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 8.6 |
| 18 | 농산업 지원 서비스업 | 8.3 |
| 합계 | | 211.3 (8.9%) |

그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업분류 기준인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부가가치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으나, 농식품 전후방 산업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세부 산업별 부가가치 파악에 제약이 있고,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체 매출 등의 통계자료도 부족하여 농식품 전후방 산업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에서 그 동안에 마련된 세부적인 농식품산업 특수분류와 농식품산업조사의 매출액 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표준산업분류 기준의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 9월 한국은행이 공표한 2023년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농식품산업 특수분류를 매칭하여 산업연관표상 분류되지 않는 하위단계 농식품산업을 구분 관리하는 등 농식품산업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예시) 산업 분류 간 매칭 》

| 현행: 산업연관표(기본부문) | | 개선: 농식품산업 특수분류 | | 현행: 산업연관표(기본부문) | | 개선: 농식품산업 특수분류 | |
|---|---|---|---|---|---|---|---|
| code | 상품명 | code | 상품명 | code | 상품명 | code | 상품명 |
| 2102 | 살충제 및 농약 | 112121 | 농산업용 화학 살균 살충제 및 약제 제조업 | 299 | 기타축산 | 139300 | 곤충 가공 기타 제품 제조업 |
| | | 112122 | 농산업용 생물 살균,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813 | 육가공품 | | |
| 880 | 사료 | 112131 | 축산용 배합사료 제조업 | 1111 | 천연 및 화학섬유사 | | |
| | | 112132 | 축산용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2222 | 화장품 | 139400 | 농산물 가공 화장품 제조업 |
| | | 112133 |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 2299 | 기타 화학제품 | 139500 | 농산물 가공 바이오연료 제조업 |
| 2000 | 의약품 | 112210 | 축산용 의약품 제조업 | 5200 |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 141110 | 산업용 농산물 중개업 |
| 3093 | 공구류 | 112310 | 농산업용 수공구 제조업 | 5200 |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 141120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구체적으로, ①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직접 반영 산업과 간접 추계할 산업을 구분하고, ② 재배업·축산업 등 전체가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은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를 직접 반영, ③ 스마트농업, 농산물 운송업 등 일부만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은 농식품산업조사 매출액과 전국사업체조사 매출액의 비중에 따른 부가가치를 간접 추계하여 반영하였다.

이러한 통계 분류 기준 간 상호 매칭과 농식품산업 매출 비중 산정을 통해, 비료·농약 등 투입재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포장·유통산업 등의 연관된 농식품산업의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면서, 추계 결과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를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세부 산업별로 변화 추이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통계 보완과 함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법‘의 정의에 ‘농산업‘을 추가하도록 조만간 법도 개정·시행 예정(‘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26.7시행 예정)으로, 농식품산업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기여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투자 촉진과 융복합 산업 육성 등 정책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 임 농식품통계 발전포럼 개요

□ 개요

○ (목적) **농식품통계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발전 방안** 모색, **데이터 기반 농정 강화**를 위한 **소통·교육의 장 마련**

○ (일시) 2025. 12. 17.(수), 09:50~14:30

○ (장소) 농림축산식품부 4층 대회의실(464호)

□ 참석자 : 총 80명

○ (내부) 정책기획관(주재), 정책담당자 등 40명

○ (외부) 한국은행, 학계, KREI 및 소속·산하기관 등 40명

□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구분 | 세션 및 주제 | 주요내용 |
|---|---|---|
| 09:30~09:50(20') | **참석자 등록 및 개회** | |
| 09:50~10:00(10') | 농식품 통계 분석·활용 경진대회 시상 및 농림축산식품통계 유공 포상 | |
| 10:00~12:00(120') | **세션 I**<br>**알기 쉬운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개념과 활용** | · (발표1) 알기 쉬운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추계<br>– 농식품 전후방 산업 부가가치 개념과 계산 모델 –<br>· (발표자) 순병민 교수(충남대학교)<br>· (발표2) 알기 쉬운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활용<br>– 부가가치 계산 모델의 활용 분야와 앞으로의 과제 –<br>· (발표자) 류상모 소장(ABC랩 농산업융합연구소)<br>※ (토론자) 한국은행, 학계, 농협 및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
| 12:00~13:00(60') | 도시락 특강<br>(생성형 AI를 활용한 똑똑한 자산관리, 자산 관리 첫걸음!) | |
| 13:00~14:20(80') | **세션 II**<br>**농식품 통계 분석·활용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 · (발표1) 제주흑돼지의 특성과 소비자 선호도 기반 가격정산 체계 개선<br>· (발표자) 변현경 차장(축산물품질평가원)<br>· (발표2)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 재해대응 체계 마련<br>· (발표자) 정상민 과장(한국농어촌공사)<br>· (발표3) 돼지 구제역 취약·위험요소 '핀셋 관리' 도입<br>· (발표자) 노진형 수의연구사(농림축산검역본부) |
| 14:20~14:30(10') | **정리 및 폐회** | |

※ 농림축산식품부(2025.12.17.) 보도자료 인용

## 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문제 없나

**○ 정부 보조 없는 지자체 운영, 사업 축소·농업인 부담 증가 '불 보듯'**

**○ 축산분뇨 자원화 통해 탄소중립·농가경영 안정화 기여, 친환경 농업 육성 목표 '역행' 지적**

**○ 사업 지방이양 유예 등 검토 통해 합리적 해법 찾아 나가야**

친환경농업 육성의 일환으로 시작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지 못하게 됐다. 원활한 지방이양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종료 기한이 내년 말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규모 축소로 인해 농업인들의 다양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상생발전기금 종료와 사업의 지방이양을 유예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관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우려점, 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짚어보며 사업 전반을 점검해 본다.

### 완전한 지방이양 이후엔 예산 감소 불가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를 증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의 시작과 함께 도입돼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가 늘어 2017년에는 1600억 원 규모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예산 규모는 2021년 1130억 원으로까지 줄었고 신청량 대비 지원율도 2013년 80.9%에서 2021년 59.7%까지 크게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4.3%를 인상하며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지방이양 사업이 추진됐다. 정부는 2단계에 걸쳐 2조9000억 원 규모의 15개 부처 소관, 80개 세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단계 이양사업으로 2022년 지방으로 넘어갔다.

원칙적으로는 2022년부터 늘어난 지방소비세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안정적

인 지방 이양을 위해 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국비분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원을 분담하는, 지방이양 전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내후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정부 보전금이 사라지면 지자체가 온전히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산업계와 농업인들은 지자체의 사업 축소와 농업인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이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방재정 여건 따라 사업 '흔들' 우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 우려는 지방이양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제기됐다.

지방이양 사업 시행 직전인 2021년 국비 약 1130억 원, 지방비 약 750억 원이 투입됐던 점을 고려하면, 완전한 지방이양 시 동일 사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는 기존보다 150%에 가까운 지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올해 기준 전국 재정자립도가 평균 43.18%이고, 가장 열악한 전북의 경우 23.64%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2021년 수준의 규모를 지방비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방재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2027년 이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지자체장의 선호도에 따라 사업이 임의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이양 사업의 운영 지원과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과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명시돼 있어 정부 보전금이 있는 동안 예산이 축소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 시·군 모니터링을 해보면 거의 다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향후 농가 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업 수혜 농가 수 감소 외에도 유기질비료 품질 저하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자재지원국장은 “정부 보전금이 없어지면 농가가 구매하는 유기질비료의 가격은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산물 유통 구조상 생산 원가가 상승해도 농가는 판매수익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농가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업 확대 역행·경축순환 저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궁극적 목표로 시행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국내 무기질비료(화학비료) 사용량은 2011년 ha당 249kg이었으며 2023년에는 242kg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 또한 화학비료나 가축분뇨 등을 이용하고 남은 양분을 나타내는 양분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며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와도 배치된다.

또한 현재 가축분퇴비를 비료로 활용하며 경축순환농업을 이뤄온 만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는 축산농가의 퇴비 처리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으로 화학비료도 지원하면서 유기질비료는 궁지에 모는 등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축산 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탄소중립은 물론 농가 경영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유지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함에도 지방에 기능을 이양해 농업과 축산 환경을 위축시킬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국가사무 ‘적합’ 의견...성급한 이양보다 면밀 검토 시급**

일각에선 애초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지방이양 대상 사업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향식(톱-다운 방식)으로 선정됐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포함된 2단계에서는 ‘지역밀착형 사업 중심’이라는 기준만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만 지방으로 이양된 배경에도 궁금증이 실린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본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이었다.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교육·홍보, 비료품질관리시스템 등 다른 내역사업 모두가 토양환경 보전과 환경친화적·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 비중이 가장 컸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만이 유일하게 지방으로 이양됐다. 이양 대상 선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 발표한 지방이양 사업들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2단계 지방이양된 사업은 전반적으로 지방사무에 적합하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은 국가사무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에 이양하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은 “재정분권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과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거나 국가사무로 기능을 재분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차적으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근거법령인 농지법에 따르면 궁극적으로는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농지를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농지는 공익적 자원이며 지역 특성에 따른 선별재가 아님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에서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당장 농지와 농업인,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행안부도 일단 지방이양을 유예하고 여러 의견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사무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사무로의 환원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지방으로 이양됐다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된 사례가 있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이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현숙 행안부 재정협력과 사무관은 “과거 사례들은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됐으나 사업비가 이양되지 않았었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4.3% 인상하면서 지방재정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지금은 재정 확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경우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방이양 유예와 국가사무로 환원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농수축산신문(2025.12.11.) 보도자료 인용

## 4 ‘농업성장 정체·곡물자급률 하락’ 심각하다

- 30년(1995~2024) 농업부문 연평균 GDP 성장률 0.5%
- 곡물(식량)자급률 22.2%(49.0%), OECD중 최하위 수준
- 전통농업 탈피 → 2·3차산업 연계 고부가산업화 방향으로
-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농가 수 16.7%·27.6% 각각 감소

## ○ 농가경영 및 소득안전망 강화 등 10대 핵심 농정과제도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주요 메가트렌드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를 비롯한 6가지가 제시됐다. 한국농업 해결 과제로는 '농업성장의 정체'를 비롯한 10가지 과제가 대두됐고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한국농업의 5대 발전 전략도 발표됐다. '단기 현안문제 대응 편중' 등 우리 농정의 낮은 신뢰 요인 8가지도 지금까지 농정의 한계와 반성을 통해 분석했다. '농가경영 및 소득안전망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를 비롯한 새정부의 핵심 농정 10대 실천과제도 함께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이달 11월 5일 aT센터에서 GSnJ 인스티튜트 주관으로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25' '농업·농촌의 회복과 혁신을 모색하자!' 심포지엄에서다. 행사의 시작은 다소 무겁고 진중했다. 故 이정환 박사가 걸어온 길이자 정신이 녹아 있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이날 첫 번째 세션 '농업·농촌의 미래혁신과 전환을 위한 농정과제'에서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대전환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하고 새정부가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활력있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 존경받는 농업인'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신속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한 정부로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격 심포지엄의 문을 연 임 교수의 첫 번째 세션 내용을 들여다본다.

'활력농업, 좋은농촌, 존경받는농업인' 실현

임정빈 교수는 먼저 한국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농업과 농촌에 큰 위협인 동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위협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을 둘러싼 메가트렌드로 △기후변화와 환경중시(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애그플레이션(식량위기 시대) △글로벌 경제통합(무한경쟁 시대) △첨단 과학기술 응용(4차 산업혁명 시대) △고령화와 인구감소 사회(지역 소멸시대) △새로운 가치지향(삶의 질 중시 시대) 등 6대 트렌드를 선정했다면서 전망과 특징, 파급 영향까지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유인했다.

그동안 한국 농업과 농촌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발전을 보지 못한 상태라고 농업 현황을 정의한 임 교수는 곧바로 7대 해결과제를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첫 번째, '농업성장 정체'다**. 지난 30년(1995년~2024년) 동안 연평균 실질 농업부문 GDP 성장률은 0.5% 수준으로 국가 전체 성장률(3.9%)의 1/8 수준이며 동기간 제조업(4.9%)과 서비스업 성장률(4.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국가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5년 3.1% 수준에서 2024년 1.2%까지 크게 감소했다. 주요 원인으로 농업생산에서 중간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농산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상승하는 반면 농업투입재 가격이 크게 증가하여 농업 부가가치(GDP)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임 교수는 분석하고 농업 활력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새로운 고부가 성장동력원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해결과제로는 지속 감소추세인 **'식량자급률의 하락'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식량(곡물) 가운데 80% 가량을 해외에서 조달 중이다. 세계 7위권 대규모 식량 수입국이면서 곡물자급률이 22%에 불과하며 낮은 자급률과 특정국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성 등으로 식량가격 등락의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식량안보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국내 생산능력 제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농업·농촌 활력 저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농가인구 및 농촌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970년 4.9%에서 2023년 52.6%까지 증가하였고 농업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같은 기간 6.3%에서 72.1%로 크게 증가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인력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25.7%로 나타나 전국의 18.6%에 비해 고령화가 심화되어 있어 젊고 유능한 농업 후계인력 육성 및 유입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처방했다.

**네 번째**는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와 취약한 경쟁력으로 급격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농업 수익성 악화'를 들었다**. 2020년 기준, 농업생산을 위한 농가지불 농자재 구입 가격지수가 1995년 44.4에서 2024년 120.1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농산물

판매 가격지수는 동 기간 56.7에서 116.3으로 완만히 증가, 농업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판매가치는 높이고 영농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책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해결과제는 **'농업소득 정체와 소득 변동성(위험) 증가'이다**. 지난 30년 동안 농가소득은 2.5배 성장했지만 농업소득은 1천만 원 내외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농가당 평균 명목 농업소득은 1995년 1047만 원에서 2024년 958만 원으로 오히려 8.5% 감소하였다. 실질 농업소득을 비교하면 지난 30년간 58.3%나 하락했고 농업소득 변동성도 여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 향상과 소득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장치 강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임 교수는 진단했다.

**여섯 번째**는 **'도농간 소득 및 삶의 질 격차'를 선정했다**. 임 교수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농가 평균소득은 1995년 96% 수준에서 2023년에는 6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50%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의료, 복지, 교통, 교육, 경제 기회 분야에서 농촌 쪽이 열위에 있다고 KREI 조사 결과를 인용, 부연했다.

**일곱 번째** 해결과제로는 1995년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심화하고 있는 **'농업의 환경 부하'를 예로 들었다**.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질소와 인이 각각 7배와 10배 더 많이 배출 중이고 농약과 에너지 사용량도 10배 이상 더 많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은 지난 2014년 8만 3000ha에서 2023년 6만 9000ha로 16.7% 감소했다. 친환경 인증 농가 수도 같은 기간 6만 8389호에서 4만 9520호로 27.6%나 감소하여 큰 문제라고 지적한 후 탈탄소·친환경적 농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 체계로의 전환은 물론 친환경 농촌 공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업·농촌의 회복과 혁신을 모색하자!'라는 주제로 '농업·농촌의 길 2025' 심포지엄이 이달 5일 GSnJ인스티튜트 주관으로 aT센터에서 성황리 열렸다.
▲ '농업·농촌의 회복과 혁신을 모색하자!'라는 주제로 '농업·농촌의 길 2025' 심포지엄이 이달 5일 GSnJ인스티튜트 주관으로 aT센터에서 성황리 열렸다.

농업 비전과 농정 패러다임 전환

한국농업의 바람직한 모습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 교수는 미래 농업의 비전을 성장과 분배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정목표로는 △농업생산자에게는 안정적 소득과 경영 보장 △국내외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 제공 △국민과 후계 세대에게는 매력있는 친환경관 전달과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농업은 전통농업에서 탈피하여 대내외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부문의 산업적 영역을 단순 1차산업 위주에서 2.3차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 산업화 방향으로의 진전이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업 패러다임 전환 방향은 세 가지 관점서 조명했다. 단기효율성서 지속가능성으로의 △새로운 가치 관점, 1차 농업생산 중심에서 value chain 관점의 산업 연계 통합의 △통합적 접근 관점, 생산성 증대에서 새로운 가치창출력 제고(그린바이오 농생명 산업화)로의 △기술혁신 관점 등이다.

우리 농정을 보는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시각도 관심을 모았다.

임 교수는 '농업 소외와 농업 홀대'라는 농업계 시각과 '모럴해저드와 퍼주기식 지원 비판'이라는 비농업계 시각을 견주며 우리나라 농정이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낮은 신뢰 요인 8가지를 나름 분석해 냈다.

먼저, '단기 현안 문제 대응 편중'을 꼽고 중장기적 안목의 지속적 정책 추진과정과 창출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농업부문 정책지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들고 농정지원을 효율로 보는 착각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협치와 소통부족'은 이해관계자간 생산적 갈등 조정이 미흡했고, '농가소득과 경영위협 완충장치 미흡'은 농정핵심 기능 부족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가치 인식 부족'을, '공익형 프로그램 한계'는 국민 체감도 낮고 소득지원정책으로만 인식되게 작용했으며, '농정추진의 법적 구속력 미비'와 '낮은 농업예산과 재정지출 방식의 한계'도 농정의 낮은 신뢰 요인으로 함께 지목했다.

임 교수는 새정부의 농정철학과 기본방향을 설명하면서 기존 농정과의 차이점으로 △생산성 강조 △농식품공급자로서 농업인 △시장자율·효율 중시 △중앙정부 주도를 꼽고 핵심 키워드는 혁신, 연속, 소통, 성과로 정리했다.

임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민주권정부의 핵심농정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에 희망을 주는 농정'을 기대하며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갈무리했다.

10대 실천과제를 보면 먼저, 지속가능 농업과 행복한 미래 농촌 유지를 위한 △농가 안정 경영 및 소득안전망 강화를 선정했다. 이어 선진형 농정의 핵심 기반인 △농가·마을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형 농정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을 들었고, 원활한 세대교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농업인 노후 보장과 미래 농업성장을 담당할 청년농 육성, 농업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혜 대상에 적합한 '농업인' 정의 재정립 등이다.

다음으로 농업생산의 기초이자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보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농지제도·관련 세제 개선, 농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미래 성장 전략산업화 육성을 위한 △스마트 정밀농업 확산 및 전후방산업 연계 강화, 모든 국민이 어울려 사는 쾌적하고 행복한 삶의 공간을 위한 △범부처적 농촌 뉴딜(재생) 정책 추진을 통한 정주 여건 및 삶의 질 개선, 중장기적 안목의 선진농정 추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는 △농정 추진의 법적 기반 강화, 매년 농업 부문의 차지 비중 감소 예방을 위한 △농정 추진의 재정적 기반 확충, 마지막으로 농업 성장과 소득위기, 기후위기, 지역위기 등 농업 농촌을 둘러싼 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정부 농정 방향과 약속 실천을 위한 △농정추진 이행 조직의 정비와 확충을 선정했다.

※ 영농자재신문(2025.11.14.) 보도자료 인용

## 5 "식량안보법 추진…농협·농지·재생에너지 개혁 중점"

**○ 농식품부 업무보고**

**- 농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민관 K-푸드 수출기획단 출범, 온라인도매시장 1.5조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예비농업인 선발 등 청년농 육성 정책이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되고, 식품과 농산업(K-푸드+) 수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등 5대 중점과제와 농협 개혁·농지제도 개선·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쟁점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고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 이상으로 상향하고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8월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타작물 재배 전환 등 쌀 수급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한다. 쌀 수급 변동상황에 대비해 평소에는 가공용, 수급 부족 시 밥쌀용으로 전환 가능한 '수급조절용 벼'도 신규 운영한다.

아울러 밀·콩 국산화 촉진을 위해 제품 개발, 계약재배 등 지원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신규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 실질 자급률 향상을 추진한다.

먹거리 돌봄도 강화한다. 대학생 '천원의아침밥'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들에게도 든든한 한끼를 새롭게 지원(590만식, 79억원)하며, 지난 정부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도 청년까지 확대된다.

관련법 개정에 맞춰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등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재해복구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수입안정보험·농작물재해보험 품목도 확대된다.

식품과 농산업을 아우르는 'K-푸드+' 수출 전략도 추진한다. 내년 150억달러 달성 목표로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출범, 중동·아프리카 유망시장에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권역시장별 '글로벌 K-푸드'를 선정해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30개소), 농식품 수출 바우처 2배 확대(720억원),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방향을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한다.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고, 예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내년 거래목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근거법률 제정, 전용 물류체계 구축(3개소),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확대(115개소) 등 소비지에서 산지 유통까지 디지털·규모화를 병행한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앱을 개발해 내년 5개 지역 시범 적용 후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개혁과제로 농협 개혁도 추진한다. 중앙회 자금·인사 투명성 제고, 조합장 임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농지제도도 단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 등)은 허용하고 영농형 태양광 등은 우선 신속하게 추진하되 쟁점은 공론화를 통해 개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농어민신문(2025.12.12.) 보도자료 인용

## 6 한농대, 「기후 위기 시대와 농업」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 12월 10일 한농대 도서관 소극장에서 개최, 한농대 교수진과 농진청, 농경연 등 전문가, 한농대 학생 및 농업인 등 참석**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는 오는 12월 10일(화) 오후 1시, 한농대 교내에서 『기후 위기 시대와 농업』 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농수산 현장 문제 해결과 농수산 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지난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농대 교수진과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계 등의 전문가, 한농대 학생 및 농업인 등이 참석하여, 작물·원예·축산 분야에서 기후변화가 생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접근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작물 분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디지털 기반 작물 생육진단, 이상기후에 따른 기능성 식물자원의 품질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작물 분과】
주제 1.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생산변화와 대응전략 (한농대 김준환 교수)
주제 2. 디지털 기반 노지 작물 생육진단 (농진청 장성율 박사)
주제 3. 기후변화 대응 가능성 식물자원의 품질관리 (한농대 구현정 교수)

원예 분과에서는 스마트온실 및 정밀 재배 자동화 기술,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한 산지의 대응전략,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원예 분과】
주제 1. 스마트온실 및 정밀 재배 자동기술 (한농대 안세웅 교수)
주제 2.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한 산지의 대응방안 (농경연 한정훈 박사)
주제 3. 한국 신선농산 수출 현황 및 확대 방안 (경북 통상 김병우 부장)

축산분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 사육관리 및 대응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축종별 사양관리 고도화, 지역 기반 순환형 축산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축산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축산 분과】
주제 1. 축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농경연 이용건 박사)
주제 2. 질소저감 사료와 양돈장 환경관리(바른 CNF 이승형 대표)
주제 3. 한우 종축생산 및 산업화-민간 씨수소 개발-(이티바이오텍 정연길 대표)
주제 4. 기후위기 시대, 가공을 통한 생존 전략(한농대 최지환 교수)

한농대에서는 이번 심포지엄 논의 결과를 기후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수산 현장 기술 개발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의 영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한농대의 기후변화 대응 교육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2025.12.10.) 보도자료 인용

## 7 북한 올해 식량작물 생산량 490만t…전년보다 2.5% ↑

**○ 농진청, ‘2025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

**○ 옥수수만 전년 대비 감소…쌀·밀·감자 등 일제히 상승**

북한의 2025년 식량작물 생산량은 490만 t 으로 추정됐다. 지난해(478만 t )와 견줘 2.5%(12만 t ) 늘어났다.

농촌진흥청은 22일 ‘2025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를 내놨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북한의 기상 여건, 병충해 발생,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 작황 자료, 위성영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작물별로는 쌀(225만 t )이 가장 많고 옥수수(152만 t ), 감자·고구마(55만 t ), 밀·보리(36만 t ), 콩(20만 t ), 기타 잡곡(2만 t ) 순이었다. 쌀은 전년 대비 4.6%( 10만 t ), 밀·보리는 28.6%(8만 t ) 늘었다. 감자·고구마는 1.9%(1만 t ), 콩은 11.1%(2만 t ) 증가했다. 옥수수는 5.6%(9만 t ) 감소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 북한지역 작물 생육기간(5~9월) 평균 기온은 21.1℃로 지난해보다 0.2℃ 낮았다. 강수량은 889.5㎜로 전년 대비 24.8㎜ 적었다.

이경태 농진청 국제기술협력과장은 “올해 북한 지역은 4월까지 완만한 기온 상승으로 겨울작물의 유효 분얼 확보에 유리했다”며 "8~9월에는 기온이 다소 높았지만, 일사량이 충분해 전반적인 식량작물 생산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농민신문(2025.12.23.) 보도자료 인용

## 8 2024 북한의 식량작물과 쌀 생산량 및 무기질비료 생산 현황

**○'24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478만 톤이며, 쌀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215만 톤으로 남한(359만 톤)의 59.9% 수준**

'24년 북한의 쌀, 보리 등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478만톤으로, 남한(419만 톤)보다 59만 톤 많음

식량작물* 중 북한의 쌀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215만 톤 생산

* (옥수수) 161만 톤 (서류) 54만 톤 (두류) 18만 톤 (맥류) 28만 톤 (잡곡) 2만 톤

【 식량작물 및 쌀 생산량 】

(단위: 천 톤)

| 구 분 | 식량작물 | | | 쌀 | | |
|---|---|---|---|---|---|---|
| | 북한 | 남한 | 남/북(배) | 북한 | 남한 | 남/북(배) |
| 2015년 | 4,512 | 4,846 | 1.1 | 2,016 | 4,327 | 2.1 |
| 2022년 | 4,505 | 4,332 | 1.0 | 2,074 | 3,764 | 1.8 |
| 2023년 | 4,820 | 4,299 | 0.9 | 2,110 | 3,702 | 1.8 |
| **2024년** | **4,780** | **4,190** | **0.9** | **2,149** | **3,585** | **1.7** |
| '23년 대비(%) | -0.8 | -2.5 | - | 1.8 | -3.2 | - |

출처: (북) 농촌진흥청, (남) 국가데이터처 「농작물생산조사」

주: 식량작물은 쌀, 옥수수, 서류(감자, 고구마), 맥류, 두류(콩, 팥 등), 잡곡(조, 수수 등) 포함

< 식량작물 생산량 >

(단위: 천 톤)

| 구 분 | 북한 | | 남한 | |
|---|---|---|---|---|
| | 식량작물 | 쌀 | 식량작물 | 쌀 |
| 2010 | ... | ... | 4,836 | 4,295 |
| 2015 | 4,512 | 2,016 | 4,846 | 4,327 |
| 2016 | 4,823 | 2,224 | 4,707 | 4,197 |
| 2017 | 4,701 | 2,192 | 4,466 | 3,972 |
| 2018 | 4,558 | 2,205 | 4,398 | 3,868 |
| 2019 | 4,640 | 2,236 | 4,375 | 3,744 |
| 2020 | 4,398 | 2,021 | 4,047 | 3,507 |
| 2021 | 4,692 | 2,156 | 4,457 | 3,882 |
| 2022 | 4,505 | 2,074 | 4,332 | 3,764 |
| 2023 | 4,820 | 2,110 | 4,299 | 3,702 |
| 2024 | 4,780 | 2,149 | 4,190 | 3,585 |

출처: (북) 농촌진흥청, (남) 국가데이터처 「농작물생산조사」

주: 식량작물은 쌀, 옥수수, 서류(감자, 고구마), 맥류, 두류(콩, 팥 등), 잡곡(조, 수수 등) 포함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3 FAX : 02-552-2814
남해화학㈜ · ㈜조비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 KG케미칼㈜

< 무기질비료(화학비료) 생산량 >

(단위: 천 톤)

| 구 분 | 화학비료 | |
|---|---|---|
| | 북한 | 남한 |
| 2000 | 539 | 3,730 |
| 2001 | 546 | 3,500 |
| 2002 | 503 | 3,301 |
| 2003 | 416 | 3,314 |
| 2004 | 434 | 3,614 |
| 2005 | 450 | 3,950 |
| 2006 | 454 | 3,183 |
| 2007 | 454 | 3,432 |
| 2008 | 479 | 3,188 |
| 2009 | 466 | 2,558 |
| 2010 | 459 | 2,815 |
| 2011 | 471 | 2,738 |
| 2012 | 476 | 2,577 |
| 2013 | 485 | 2,577 |
| 2014 | 501 | 2,320 |
| 2015 | 528 | 1,982 |
| 2016 | 604 | 2,065 |
| 2017 | 573 | 2,349 |
| 2018 | 605 | 2,332 |
| 2019 | 612 | 2,311 |
| 2020 | 670 | 2,142 |
| 2021 | 612 | 2,287 |
| 2022 | 659 | 2,039 |
| 2023 | 680 | 1,750 |
| 2024 | 743 | 1,723 |

출처: (북) 관계기관, (남) 한국비료협회(회원사 기준자료)

※ 국가데이터처(2025.12.23.) 보도자료 인용

##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생산·출하 현황

(단위 : 천 톤)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4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
|---|---|---|---|---|---|
| 생 산 량 | 2,039 | 1,750 | 1,723 | 1,002 | 984 |
| 출 하 량* | 1,860 | 1,769 | 1,647 | 979 | 981 |

* 협회 회원사 기준, 출하량은 농업용과 수출용 합산임

###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원자재 톤당 수입가격(달러) 및 환율

(단위 : $ , 원)

| 구 분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 요 소 | 868 | 650 | 469 | 429 | 402 | 395 | 416 |
| D A P | 948 | 859 | 638 | 528 | 592 | 568 | 673 |
| 염화칼륨 | 633 | 965 | 533 | 346 | 330 | 310 | 316 |
| 환 율 (매매기준율) | 1,232 | 1,351 | 1,295 | 1,317 | 1,350 | 1,377 | 1,427 |

※ 관세청 무역통계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 6 이달의 주요 인사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주무관 나은혜**(12.22)
(첨단기자재종자과 산림탄소상쇄제도 담당 → 비료 담당)

❑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상무 임규원**(12.3 발표, 2026년 1월 1일자 발령)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장 → **농업경제 상무**)

❑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지주 자재사업부장 정태연**(12.10 발표, 2026년 1월 1일자 발령)

## 7 회원사 제품 소개

###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트리플10
○ 성분량 : 10-10-10+1+0.1
○ 특성 및 효과
- 작물재배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만 꽉 채운 비료
- 칼슘, 유황까지 놓치지 않은 가성비 좋은 비료
- 질소, 인산, 칼리 외 미량요소(고토, 붕소 등)까지 포함하여 고품질 농산물 수확가능
- 질소, 인산, 칼리의 균형잡힌 영양소 공급
- 텃밭용, 가정용 작물에도 부담없이 시비가능

### ❑ (주)조비

○ 제품명 : 원코트 6M
○ 성분량 : 16-8-15+2+0.1+황+미량요소+아미톤
○ 특성 및 효과
- 원코트는 국내 최초의 완효성 제조기술에 생분해성이 우수한 피복물질이 적용된 제품
- 비료 한 알에 질소, 인산, 칼리, 다량요소, 미량요소,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그 알갱이를 100% 피복한 올코팅 완효성비료
- 1회 시비로 비효가 5~6개월 지속되어 웃거름 생략 가능하므로 시비 노동력 절감되는 생력형 완효성비료
- 아미톤은 생리장해 예방 및 면역력 향상 등 종합적인 대사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 추출 기반 대사활성 물질
- 고농도 황 함유로 작물의 맛, 향, 색 등의 품질향상

## ❑ (주)팜한농

○ 제품명 : 롱스타K플러스
○ 성분량 : 22-7-10+고토1+붕소0.1
○ 특성 및 효과
- 질소는 물론 칼리까지 코팅되어 후기 벼 이삭거름 및 웬예 웃거름까지 생략이 가능하고 꾸준한 양분공급으로 작물의 품질을 향상
(기존제품(롱스타플러스)보다 성분을 상향(21→22%)하였으며 질소만 코팅된 비료 대비 시비절감 가능
- 질소, 인산, 칼리가 알맞게 구성된 완효성비료로 초기 생육 우수, 가지 수 확보, 저온 및 제초재 약해에도 강해 건강한 벼농사 가능
- 후기까지 양분이 공급되어 등숙율과 완전미 비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 칼슘, 규산, 유황 함유로 미질 향상, 생리장해 경감에 도움

## ❑ ㈜풍농

○ 제품명 : 올코팅한포로
○ 성분량 : 32-6-8
○ 특성 및 효과
- 올코팅한포로 비료는 이앙시 밑거름 1회 시비로 전 생육기간동안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주는 완효성비료
- 100% 올코팅으로 입자가 균일하고 매끈하며 단단한 경도로 제조되어 측조시비 등 기계시비시 막힘없이 작업성이 뛰어남
- 완효성비료로 양분 유실이 없이 흡수효율이 높아 이끼, 괴불 발생을 경감하고 벼 초기 뿌리활착 및 유효분얼수 확보가 안정적

## ❑ ㈜한국협화

○ 제품명 : 파워한번에OK

○ 성분량 : 22-6-9+고토1+붕소0.1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 요소 및 완효성 NK 함유
- 초기 생육에 효과적, 증수 효과 우수
- 측조시비 가능하며 벼 생육 주기에 알맞게 영양 공급
- 한번 시비로 이삭거름까지 지속(1~120일 지속)

## ❑ ㈜세기

○ 제품명 : 원샷30

○ 성분량 : 30-7-8+1+0.1

○ 특성 및 효과

- 원샷30비료는 다수확 재배에 적합한 3요소와 고토, 붕소, 유황, 석회, 규산 등의 미량요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매우 좋음
- 가지거름을 생략할 수 있어 시비노동력과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는 비료
- 인산, 칼리가 과대하게 축적된 논이나 밭에 적합한 저인산비료로 이끼와 괴불발생이 심한 토양에 효과적
- 수도작 외에 과수, 과채류, 원예작물의 생리예방과 맛, 당도, 때깔을 향상시켜 줌

## ❑ KG케미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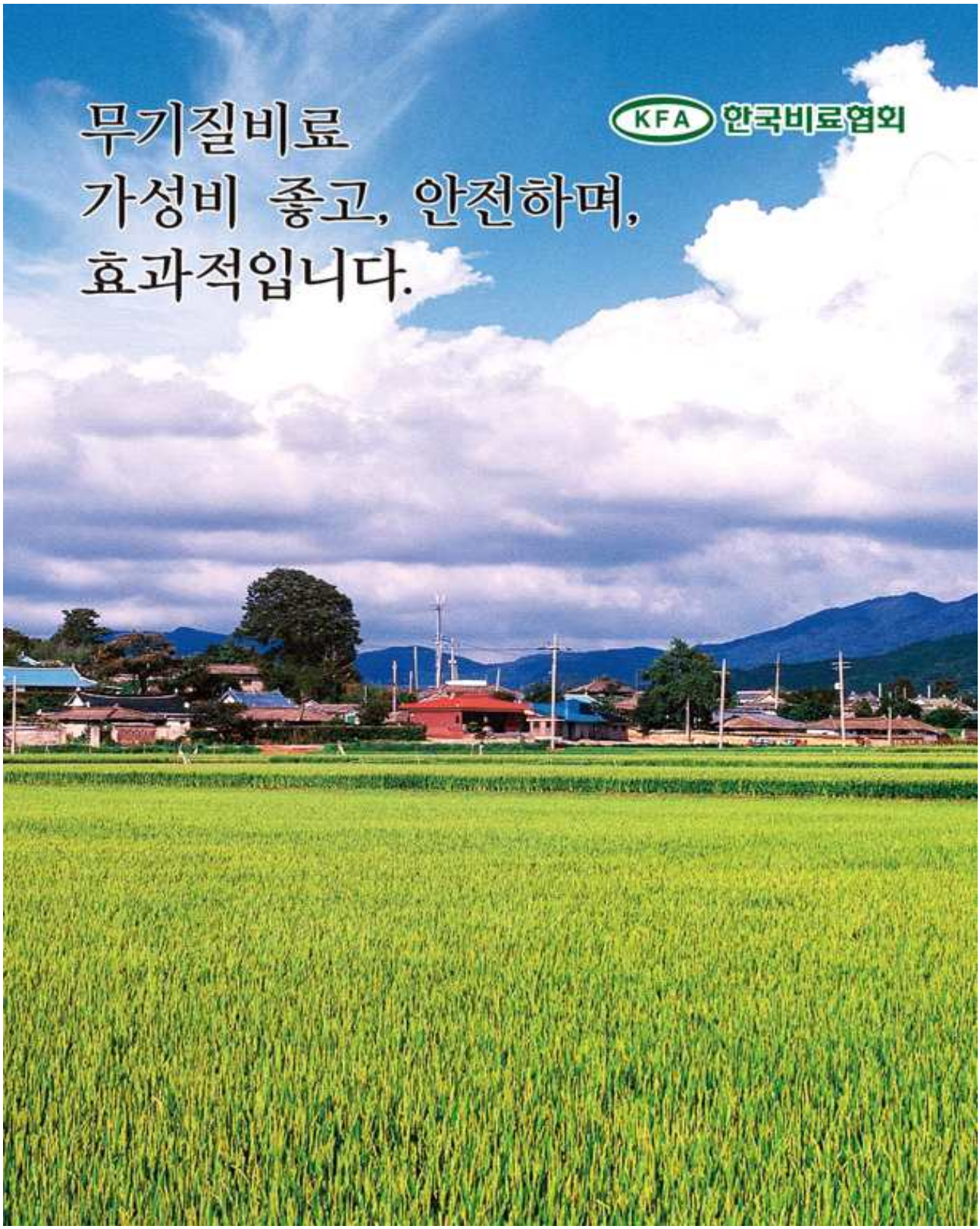
○ 제품명 : 참세대22

○ 성분량 : 22-7-9+1+0.2

○ 특성 및 효과

- 속효성과 지효성 원료가 조합되어 작물의 초기 생육 및 후기까지도 비효가 지속됨
- 강도를 강화하여 분진발생이 적어 측조시비(기계시비)시 편리
- 인산 흡수를 촉진시켜 이끼 발생을 방지함

※ 회원사 자료 인용




출처 : 농어촌공사 농촌경관사진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3 FAX : 02-552-2814
남해화학㈜ · ㈜조비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 KG케미칼㈜